



바젤위원회, 은행 유동성 규제 완화

이정환 선임연구원

-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글로벌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의 유동성 규제¹⁾ 도입 시기와 범위를 완화하기로 함.
 - 27개 주요국 중앙은행장과 금융감독기관 책임자로 구성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은행의 유동성 규제 도입 시한을 2015년에서 2019년으로 4년 유예함.
 - 이에 따라 단기유동성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²⁾은 2015년까지 60%를 충족해야 하며, 이후 4년 동안 매년 10%p씩 높아져 2019년부터는 기존(안)과 같은 100%에 도달하게 됨.
 - 은행들이 보유해야 하는 유동성 자산의 범위도 기존의 현금, 국채, 우량회사채, 커버드본드에 추가하여 주식과 우량 주택저당채권(highly rated residential mortgage-backed securities)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됨.
 - 기존(안) 유동성자산에 포함되었던 AA- 등급의 우량회사채는 BBB- 등급으로 낮아짐.
 - 전문가들은 단기유동성비율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바젤 III의 또 다른 핵심 유동성 규제안인 중장기 유동성비율(NSFR: Net Stable Funding Ratio)³⁾역시 완화될 것으로 예상함.
- 유동성 규제가 적용될 경우 은행의 여신이 축소되고 국채보유 리스크(sovereign risk)가 증가하는 역효과가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음.
 - 은행들이 추가로 확보해야 할 유동성 자산이 증가하여 은행의 비용부담이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해 여신축소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지적되어 왔음.

1)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유동성 규제는 은행의 급격한 자금 유출이 30일간 지속되는 시장 전체 위기상황을 가정하여 유동성 버퍼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2010년 수립됨.

2) $LCR = \text{유동성자산} / \text{순현금유출}$

3) 중장기유동성비율은 금융기관의 자산부채구조에 내재된 유동성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1년 내 유출 가능성이 큰 부채를 충당할 수 있는 장기 조달자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며 다음의 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함. $NSFR = (\text{금융기관의 이용 가능한 자금규모} / \text{필요 자금규모}) (\geq 100\%)$

-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209개 은행을 대상으로 기존의 방안대로 유동성 자산 규제를 적용한 결과 2011년 말 현재 1.8조 유로(2.4조 달러)의 유동성 자산이 추가 확충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은행들은 국채 매입 증가로 각국 정부의 상환능력에 더 크게 노출됨.

■ 전문가들은 글로벌 은행들의 자산 확충 부담이 줄어 대출이 활성화되고 통화정책 효과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Barclay는 추가로 확충해야 할 고유동성 자산이 줄어들어 세전 당기순이익이 4%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동성 규제가 엄격할 경우 은행 간 대출이 억제되어 통화정책의 효과가 약화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음.

(Bloomberg 1/7, 1/8)